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2024. 11. 6. (수) 14: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설렘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서리라 생각합니다.

‘첫 위원직’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수락해 주신

아홉 분의 민간 위원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그간 가상자산 정책 추진경과

그동안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정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은 지원하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트래블 룰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금융당국은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이용자 제도의 안착과
국민의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법정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이 큰 분야인 만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라는 입법 취지로 이해합니다.

지난 9월부터는 법률 안착과 병행하여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위원들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Ⅲ.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운영방향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률·학계·소비자·블록체인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 및 우선순위 등은
가상자산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확충하겠습니다.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여
검토 과정을 보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IV. 맺음말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하여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국민에게 이롭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 뿐 아니라 시장과 현장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